

## 한국판 뉴딜 "졸속"...수도권 집중 부추길 수도

매일신문 배포 2020-10-23 16:20:19 | 수정 2020-10-23 21:23:37 |



대구형 뉴딜 대토론회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대구시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구만의 뉴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대구만의 뉴딜 전략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이란 주제로 대구형 뉴딜의 성공 조건을 살펴보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대구사회연구소, 대구시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으로 언급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7월에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공식화됐다.

정부의 뉴딜정책 방향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부추기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경제를 추구하는 '그린 뉴딜'으로 구분된다.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모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기존에 나와 있던 정부 사업안을 뉴딜로 제목만 바꾸는 경우가 많아 내용이나 형식이 너무 졸속이다"라며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임경희 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세히 살펴보면 슬로건과 달리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거나 실행 계획이 매우 부족하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의 소비자인 '지역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대구만의 뉴딜 전략을 찾기 위해선 대구형 뉴딜정책을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형 뉴딜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네이밍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순기 경북대 IT 대학 컴퓨터학부 교수는 ▷지능형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천 계명대 미래형 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은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하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데이터 분석수요자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기관과 연결해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mailto:msg@imaeil.com)